

‘쿠팡 사태’ 소상공인 신고 미지근… 피해 접수 약150건 그쳐

〈29일 현재〉

중기부, 소상공인聯과 신고센터 운영 2월 말까지 접수… 지원책 검토 소공연 “실질적 손실 보상” 촉구 한상총연 “아이템 워너 폐기” 요청

소상공인들이 ‘쿠팡 사태’로 피해를 입었어도 신고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이 20일을 지났지만 신고 건수는 150여 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쿠팡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소공연 누리집을 통해 쿠팡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총 매출중 쿠팡(쿠팡이츠) 매출 비중 ▲쿠팡을 제외한 입점 온라인 플랫폼 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 등과 함께 피해 상황 등을 적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 상황에는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 중에서 골라서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쿠팡 사태 범정부 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2월 말까지 받는다.

이와 별도로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코너에 하면 된다.

앞서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이후 발생한 ‘탈팔러쉬’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쿠팡 측에 ▲매출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손실 보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플랫폼 갑질 및 수수료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공연은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 의 고향을 짜내어 미국 정치권의 환심을 사는 ‘방탄 로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혁신의 가면을 쓰고 ‘아이템 워너’, ‘PB 상품 우대’, ‘가격 압박’ 등 악랄적 영업을 일삼는 쿠팡의 두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 측에 공정거래 이슈에 휩싸인 ‘아이템 워너’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공정위를 향해선 ‘직무유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쿠팡이 도입하고 있는 아이템 워너는 최저가나 평가가 좋은 판매자를 대표로 노출하고 사진·리뷰를 승자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앞서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자

영업자총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납이 정성을 다해 관리한 상품 소개와 리뷰를 최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권 침해”라며 “쿠팡은 즉시 판매자별로 리뷰를 분리하고 위조품 유통을 사실상 방조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선 “과거의 부실 조사를 반성하고 워너 제도가 어떻게 짝퉁 유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판매자 간의 공정 경쟁을 어떻게 저해했는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달 중순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출판분야에서 공정거래를 촉구했다. 앞서 출판사들은 쿠팡이 주로 ▲성장장려금·광고비 인상 ▲공급물(소매가격 대비 납품원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78곳으로 확대

전문가 통해 채무조정 등 종합상담 지원
李차관 “재기 디딤돌 역할, 운영 내실화”
고환율 대응, 정책자금 만기연장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곳에서 7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기부는 29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개소식을 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센터에선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진행,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병권 차관은 “소상공인이 복잡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 3번째)이 29일 경기 화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지원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센터가 촘촘한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면서 “전국 78개 센터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든든한 ‘재기 디딤돌’이 되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1400원대 고환율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원부자재 수입 비용 증가, 물류 및 보험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상환여력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의 정책자금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한다.

수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환리스크 상담·교육’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내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연 1000건의 ‘납품대금 연동망 정 컨설팅’으로 수입 원자재의 환동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동 약정 체결 문화에 앞장선다.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국 수출지원센터에서 현장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접수된 의견은 관계 부처로 전달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

/김승호 기자

모델솔루션, 의료기기 토털 솔루션 공개

‘MD&M West 2026’ 참가
진단·당뇨 관리 기기 등 전시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글로벌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모델솔루션이 내달 3일부터 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미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컬 디자인&매뉴팩처링 웨스트 2026(MD&M West)’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MD&M 웨스트는 의료기기 설계·제조·엔지니어링 전반을 아우르는 북미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메드테크(MedTech) 기업과 의료기기 제조·공급망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회에서 모델솔루션은 디자인과 정밀 제조 기술을 결합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품 기획부터 개발·생산 및 양산까지 아우르는 ‘의료기기 토털 하드

웨어 솔루션 역량’을 소개한다.

아울러 모델솔루션이 개발에 참여해 현재 핵심부품을 공급 중인 ▲진단·분석용 의료기기 ▲유전자 치료 관련 의료기기 ▲당뇨병 관리용 의료기기 등을 전시한다.

유형민 모델솔루션 대표는 “모델솔루션은 디자인부터 프로토타입, 양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제조 솔루션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고객들의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中소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가입 4만명 목표

중기부·중진공, 4대협약銀과 협의회 재직자 신청방법 개선 등 활성화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4개 협약은행이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잡았다.

중진공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중기부와 협약은행인 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6년 기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 회의에는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과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그리고 4개 협약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해 우대저축공제 이용 편의성 제고와 가입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참여 기관들은 올해 저축공제 공

동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설정하고 ▲재직자 신청 방식 개선 ▲재직자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재직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우대저축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 운영 중이다.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로 저축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근로자에게 약 3980만원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기술탈취 분쟁 ‘K-디스커버리’ 도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문가 조사·법정의 당사자 신문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분쟁시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돕는 ‘K-디스커버리’ 도입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